전남도, 인구정책 100개 추진에도 3년만에 기초단체 하나 사라져

■광주·전남 인구절벽 현황과 과제

'백약이 무효'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온갖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 진해왔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남의 경우 무려 100개나 되는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중임에도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86만8856명 으로, 지난 2016년 190만3914명에 견줘 3만명 넘게 줄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이 때문에 전남 자치단체들의 인구 정책은 '인구 늘리기'가 아닌, '인구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그래도 교육·일자리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 역으로 옮겨가는 인구가 매년 7000명이 넘는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수 도권 인구는 이르면 9월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다. '혁신도시 시즌 2'로 일컫는 공공기관 지방 이 전 정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 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구 정책만 무려 100개=전남도가 올해 내놓 은 인구 정책은 모두 100개다. 전남의 최대 목표인 '인구 200만명 회복'을 위해서다. ▲젊은 세대 유입 ·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28개)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25개)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확대・창출(28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 성 및 정주여건 개선(19개) 등을 추진하는 데 들어 가는 사업비만 1조1844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2만2000개의 일자 리를 창출하고 19만 8000명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남도는 특히, 매년 하던 74개 사업도 모자라 올해 처음으로 26개를 추 가했다.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는 시행 착오를 최소 화하도록 30개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전남에서 먼 저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 일정기간 머 무르며 영농기술, 인근 농지·주택 정보, 농촌 생활 방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 원센터 조성사업 등은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수요 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젊은이들이 전남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여건과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100개나 되지만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지 미지수다. 당장,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 으로 2013년 6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6년동안 계속 '데드크로스' 현상이 빚어진 전국 유일무이한 광역

광주시는 출생아수가 2016년 1만1580명, 2017 년 1만120명, 2018년 9100명으로 매년 줄어들자 '24시간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를 다음달 여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 입했다.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지난달 광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 역에도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인구현황을 분석하고, 선 진 인구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해 인구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전략과 민관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 귀농·귀촌인 유치, 일자리 만들기 수년째 눈물겨운 '인구 지키기' 수도권 쏠림 해소가 근본 해결책

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은 떠나가고 수도권엔 몰리고=전남 지역 인구는 올 들어 7월 말 기준으로 186만8856명 이다. 올 1월(187만8904명)에 견줘 6개월 만에 1 만명(1만48명)이 넘게 줄어든 것이다. 나아질 조짐 도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을 통해 2017년부터 30년 간 광주는 23만명, 전남은 18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럼에도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현상은 더 심화되 는 형국이다. 당장, 통계청 인구 추이대로라면 오는 9월 전후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 아 공개한 '최근 10년 간(7월 1일 기준)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 추이'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584만 4000명(49.98%)으로, 지방 인구(2586만5000명· 50.02%)보다 2만여명 적은 수준이다. 지난 2010년 만 해도 전국 인구 중 49.3% 수준에 머물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5%(2013년), 49.6%(2017년), 49.8%(2018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내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6%에 이르는 수 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정책들은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퇴색하면 서 지방 인구 유출과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발길 돌리도록=젊은층이 지방을 떠나는 것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 해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 의 일자리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같은 이유

지방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도시 시 즌 2'로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서둘 러야 한다. 전남도의 경우 전남지역으로 옮겨올 이 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23개(에너지·화학 5개, 농생 명 2개, 문화예술 5개, 정보통신 3개, 해양수산 3 개, 환경 5개)를 꼽고 청와대와 민주당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후속 대책은 미진하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와 같은 수도 권 중심 체제로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 제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 는 과감한 균형 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촉 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그렇게 사라져 가는 도시의 풍경과 기억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9) 재개발

"…불도저의 힘보다 망각의 힘이 더 무섭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간다. 나도 요샌 거기 정말 그런 동산이 있었을까 내 기억을 믿을 수 없어질 때가 있다. 그 산이 사라진지 불과 반년 밖에 안 됐는데 말이다."

몇 년 전 타계한 우리시대의 이야기꾼 박완서 작가(1931~2011)는 자전소설 '그 산이 정말 거 기 있었을까'에서 작가가 가장 좋아하던 동네 자 그마한 동산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어느 날 불 도저에 의해 밀려 없어져버려 몹시 아쉬워한다.

작가의 탄식처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 까'를 자주 되뇌게 되는 요즘이다. 자주 다니는 길목인 동강대를 지나 광주교대, 혹은 광주고를 거쳐 도심을 가노라면 중흥동, 풍향동, 계림동 등 주택이 많았던 곳들이 불도저로 밀리거나 공 사 가림막에 가려진채 대대적인 재개발 현장으 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병원과 약국이 있었고, 딸아이 교복을 맞췄던 매장, 단골식당, 이불가게 등등 눈에 선한 풍경 이 모두 사라져버려 하루아침에 동네 지도가 바 뀌고 과연 상전벽해라 여길 만큼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다.

박인선작가(1982~)의 '콘크리트 건물 03'



박인선 작 '콘크리트 건물 03'

(2015년 작)은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오래된 가 옥을 불도저로 허물고 있는 순간을 사진 콜라주 와 페인팅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한때는 번듯했 을 건물이 도시 재개발의 뒷전에 밀려 허망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광주시내 곳곳 구도심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작가는 2006년 광주 까치고개에 위치한 외갓 집이 아파트로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헐리 기 전까지 그곳에서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의 오래되고 낡은 가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기억 속 도시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겠지 만 또 그렇게 축적된 삶과 기억들 역시 우리들의 초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